상자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유사 · 업무중복으로 실적「제로」… 비효율적 겉치레행정의「표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결 · 심의 및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돼 있는 상공자원부산하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적근거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 극히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상공자원위원회(위원장 조순승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상공자원부산하 위원회는 모두 32개로 무역관리위원회 6개, 에너지관련위원회 6개, 중소기업관련위원회 6개, 광업관련위원회 3개, 공업발전관련위원회 3개, 산업디자인관련위원회 2개, 기타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92년부터 94년 현재까지 3년동안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로 전체의 38%에 달하며, 이 기간동안 예산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도 19개로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심의안건 자체가 유사한 위원회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위원회의 통 · 폐합과 함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체위원회 가운데 92년부터 현재까지 회의개최실적이 없거나 예산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위원회는 무역정책심의회를 비롯, 연계무역 추진위원회, 중앙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중소기업 계열화촉진협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염업심의회, 광업개발심의회, 광산보안위원회,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로 예산지원은 됐으나 개최실적이 없는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를 포함, 모두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최실적은 있으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공업발전심의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비롯 모두 19개로 전체의 59%를 차지, 형식적인 겉치레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위원회 가운데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당초 취지가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도급계약 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 · 조정하는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기능을 수행하는 바람에 구성조차 되지 못하는 등 사전행정의 치밀함이 결여된 비효율적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심의안건이 유사한 위원회는 무역정책관련위원회의 경우 무역정책심의회, 연계무역추진위원회, 무역자동화심의위원회,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 등 4개로 이들 모두 무역정책자문 역할의 공통된 업무성격을 띠고 있어 모양갖추기에 급급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업관련위원회는 광업조정위원회, 광업개발심의회, 광산보안위원회 등 3개이나 광업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3년동안 단 한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관련도 중앙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심의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 창업지원심의회 등 6개나 있으나 업무성격의 중복으로 개최실적이 저조, 정책반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감사 지적에 따라 산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착수, 유사위원회의 통 · 폐합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반영 및 위원회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12/26>